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생명안전 시민넷 (담당 : 박순철 사무처장 010-4328-7722)
제 목 [보도자료]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날 짜 2022. 11. 03. (총 15 쪽)

보도자료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일시 장소 : 11. 03. (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보아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 취지와 목적

-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에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의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붙임자료1 :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 11. 03. 목 10:3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생중계 : 4.16연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416act.net>) 라이브
- 주최 :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4.16 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 가슴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종교계)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시민사회·노동단체)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 프로그램
 - 사회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 기자회견 취지와 인사말 : 송경용 신부
 - 주요 발언
 - 1) 이태원 참사의 성격과 진단, 문제점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2) 이태원 참사 정부의 대응과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3) 경찰청 작성 정보문건 등 정보경찰의 문제점 :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 4) 이태원 참사 언론 보도의 문제점 :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5)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종교계(성공회)의 입장 : 민김종훈 자캐오 신부(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 신부)
 - 6)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 최희천(생명안전 시민넷 집행위원)
 - 7) 이태원 참사와 중대재해처벌법 : 최명선(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운동본부)
 - 8) 재난 참사, 산재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의 연대 발언 :
김종기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수진 아빠)
조순미 (가슴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위원장)
이영문(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허재용 엄마)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김용균 엄마)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정정은(문화연대 사무처장)
 - 조성천 교무(원불교 인권위원회)
 - 황인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질의응답

▣ 붙임자료2 :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헬러원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큼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헬러원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은 묵묵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위로금의 액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전 참사에 비추어볼 때 위로금을 언급하면 피해자를 폄훼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피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애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고,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여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동향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입니다.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참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해야 하고,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알리십시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나갈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존중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계획도 밝힐 것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4.16 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 가슴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종교계)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시민사회·노동단체)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 붙임자료3 : 발언문

1. 이태원 참사의 성격과 진단, 문제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태원참사로 156명의 무고한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삼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태원참사는 정부나 관련 공권력이 안전관리의무를 게을리해서 발생한 인재임이 분명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간절하게 안전사회 실현을 염원했지만, 말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아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안전대책 실종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마스크착용의무가 해제된 상황에서 맞이한 첫 번째 할로윈축제였고, 또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의 군집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당국은 그에 걸맞는 응당의 안전조치를 거의 방기하였기에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재난대응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전날인 금요일 저녁부터 유사한 참사조짐이 나타났고, 특히 토요일 저녁의 참사 4시간쯤 전부터 11건의 112신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적인 참사예방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만연히 방치한 결과 이번 참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못지않게 심각한 일은 정부당국의 재난수습 실패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력과 소방관이 더 많이 배치되었더라도 이번 참사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스스로의 책임을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나, 또한 지금은 추모할 때이지 추궁할 때가 아니라는 집권여당의 정진석 대표, 그리고 외신간담회에서 우스개 농담이나 하면서 국격을 실추시킨 한덕수 총리 등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적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기에 족하다고 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당국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태원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먼저 국정실패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발표된 대통령 담화 등을 보면, 대통령이 정부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둔 우리 국민들은 걱정이 매우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주체가 주도하는 꼬리 자르기식 진상조사를 넘어선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추진되어야 하고, 또 책임 져야 할 사람들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한편 일부 제도언론의 저널리즘 실종사태는 매우 서글픈 현실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주최자가 없어서 예방책을 강구할 수 없다거나 적용할 매뉴얼이 없다는 정부당국의 강변을 주로 보도하는 동안, 우수한 외신들이 먼저 이태원참사가 인재임을, 또 안전관리 실패 때문에 발생했음을 지적한 점은 부끄러운 한국 언론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참사의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2.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종교계(성공회)의 입장 :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 민김종훈(자캐오) 신부

당신은 오늘 하루도 안녕하십니까?

- 이태원 10.29 참사에 대한 종교계(성공회)의 입장 -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쉽지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만원 전철이나 버스 앞에서 잠시 주춤거릴 때마다 깊은 당혹감을 느낍니다.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았습니다.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뉴스 속보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고, 터져 나오는 울음과 '어떻게'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뉴스 자막으로 처리된 희생자와 피해자의 숫자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걸 보며 참담한 마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숫자로 처리될 수 없는 저마다의 삶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축제에 다녀갔거나, 그곳에서 살아남고 도왔던 사람들의 충격과 고통 또한 너무 크고 깊습니다.

참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시간, 국가와 사회는 자취를 감춥니다.

우리는 매해 비슷한 장소에서 진행된 대규모 축제인데, '왜 중앙지방 정부의 행정과 경찰력은 이 참사를 막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듯이,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는 징후는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한 골목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잠시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각자도생의 시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분명 다 갖춰져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시스템과 영성한 프로세스들로 인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간절히 필요했던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 신고나 구조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행정과 경찰력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윗선들과 정부여당은 일선에 있는 이들이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모르는 척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인들이 자주 하는 인사말 중에 서로의 안녕을 비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살롬, 살람, 평화. 모두 신과 공동체가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기를 소망하는 인사입니다. 이런 종교나 사회에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안전과 평등에 대한 믿음과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이런 믿음과 감각을 주지 못해서, 안팎으로 비판 받기도 합니다. 그 종교나 사회 안에 있다면 좀 더 안전하다는 믿음과 감각, 제대로 된 신앙과 사회 시스템 가운데에서 평등하다는 믿음과 감각. 그런데 수많은 징후를 거쳐 대형 참사를 맞이한 자리에서, 국가와 사회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신당했습니다.

종교인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며 연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먼저 이태원에서 열린 할로윈 축제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희생자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깊은 애도와 진상규명, 그리고 연대는 하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사회적 통제 이후 잠시 열린 축제의 자리에서도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제대로 작동하고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대해, 설부른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가볍게 진단하고 무책임하게 해석하며 비난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과 할로윈 축제 그리고 가장무도회는 엄숙주의를 강요하는 평균적인 사회와 문화, 윤리 기준에서 아주 잠시 벗어나, ‘정상, 표준, 평균’이란 무엇인지 되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희생당한 분들 가운데, 지난 정부도 반복해서 ‘나중예’를 외치며 배제시킨 성소수자와 미등록 이주민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참사의 원인과 과정이 단편적이지 않고 복합적이듯이,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자리와 이야기도 간단명료하지 않다는 걸 알려줍니다. 문제 진단과 해결책도 간단명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향한 우리의 비판과 변화를 위한 요구도 특정한 정부와 권력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문제 앞에서 유체이탈화법을 일삼는 이들이나 나중예를 외치는 이들은 다른 듯 같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종교인들은 이번 참사로 인해 생사를 달리한 분들, 다친 가운데 생명의 끈을 붙들고 있는 분들, 그곳에 있었거나 다녀와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에 고통 받는 분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애썼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신과 우리 공동체가 주는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깊은 애도로 희생자를 비롯해 고통 받는 모든 분들과 연대하며, 복합적인 참사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가 너무 늦지 않게 신중하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제대로 책임지는 조치를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희생자와 피해자, 그 참사의 자리에 있던 분들, 이번 사회적 참사로 인해 상처 받고 슬퍼하며 고통 받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와 용기, 지혜가 되어, 이 깊은 아픔을 함께 지나갈 것입니다. 그 아프고 힘겨운 여정에 저희 종교인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남 탓만 하며 회피하기 바쁜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녕한 하루를 빕니다. 살롬, 살람, 평화.

3.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 최희천(생명안전 시민넷 집행위원)

이번 참사의 희생자분들은 모두 소중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온전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그 분들의 잘못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기에, 희생자분들과 가족, 지인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의 슬픔을 공감해 주시고,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 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자, 가족, 친구 등 피해자분들은 누구보다도 이번 참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분들은 같은 아픔을 지닌 다른 가족들과 의견을 나누고, 참사의 원인 조사와 지원, 제도개선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의 참사들처럼 피해자들이 ‘피해자다움’을 강요받고 위축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절대 온전하게 회복하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서로 연대할 권리, 자신들과 관련된 사항을 알 권리, 필요한 과정에 참여할 권리,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배보상을 통해 잘못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신체와 정신을 회복할 권리, 추모의 권리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 전체가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을 조력할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생명안전기본법'에도 발의되어 있는데,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와 이 사회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희생자분들과 그분들의 가족, 친구, 지인, 그리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재난 참사, 산재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의 연대 발언 : 김중기 (4.16 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수진 아빠)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비보로 고통에 잠겨있을 유가족 분들께 같은 아픔을 먼저 겪은 부모로서 깊은 위로와 함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번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이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우리 아이들 또래의 젊은이들이라는 점에 더더욱 가슴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이 비극적인 참사에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 했더라도 막을수 없었다' 라는 주무부처 장관의 말이나 '집회 시위가 아니면 경찰은 국민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말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으로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 부처의 장관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인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거리두기가 풀림으로서 많은 인원이 몰릴것 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 동안 몇 번의 경험으로 비추어봐도 미리 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경찰인력을 배치하고 통제를 해서 안전사고 없이 축제를 치룬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전 처럼 똑같이만 했더라도 충분히 막을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고 거기에 축제 참가자들의 11번의 긴급한 구조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등 막을수 없고 어쩔수 없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이고 참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서 그랬다는, 단순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참가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떠넘기기식 책임회피에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었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은 또한 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또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가의 당면 과제임에도 아무소리 하지 말고 입다물고 추모 만 하라고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부상피해자들의 수습과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모든 사항에서 한점 부족함없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처리해도 그 상처와 아픔을 달랠수 없을 것인데 보상금을 운운하며 유가족의 마음을 헤집는 등 해서는 안 될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8년 전 세월호 참사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제발 세월호 참사를 끝으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억울한 유가족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지난 8년이 넘는 시간을 싸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없고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저희 세월호 가족들은 큰 자괴감과 함께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 국가는 이 정부는 이 책임자들은 반성도 없고 바뀐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고통스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이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고 다시는 국민들이 억울한 유가족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5. 재난 참사, 산재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의 연대 발언 :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위원장)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식과 정부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직면한 우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욱 두렵고 허망합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는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똑 같겠지만, 십여 년도 넘는 죽음의 행렬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이태원참사가

있던 지난 10 월 29 일에도 피해자분의 부고가 있었고, 1,800 명이 사망한 참사임에도 대통령이 직접 한 책임약속도 어긴 채 버려져 난민이 된 참사이기 때문에, 대형참사를 먼저 겪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관심이 동정으로 변해가고, 그 시선이 나중에는 기피와 손절로 이어지는 순서를 너무도 뼈저리게 느껴왔던 참사 피해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며, 지금, 이 참담한 마음이 들게하는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가족에게 이태원 참사만큼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유가족의 슬픔에 희생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더 이상 고통과 무한 책임이 반복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무한정 감내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는 후진국형 미해결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호소합니다.

피해자를 위해 진정한 위로와 지원을 해주고 싶다면, 잘못이나 책임에 대한 선부른 판단을 먼저하기 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관련자의 인권 침해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피해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시민사회가 먼저 보듬어 주고, 침묵하고 지켜보며. 숙연하게 애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올바른 생각하며,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외상과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께서, 피해자들이 구걸이나 동정을 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2 차적 언론 참사를 빚어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격과 허탈과 극도의 고통을 동시에 몸으로 겪은 피해자만이 알 수 있고, 피해자만이 느끼는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한 심정을 공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무심한 말들로 피해자와 피해자 유관련자를 힐난하는 행위들은 벌어진 참사에 대한 여러 가설이 면밀하게 조사되고 검증된 후에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참사를 겪은 후에도 남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처럼 흥터로 남고,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는 쉽게 무시되기 때문에 피해의 범위가 무감각하게 재단되고,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를 측정, 측량을 합니다. 이러한 현행, 사고처리 중심적인 관행대로라면, 피해자들은 더 고통스럽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사고 수습에서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이 직접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정확하고 신중하게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원인과 구급, 수사 과정의 문제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태원참사로 희생된 그 분들은 미래가치가 무한한 젊고, 어린 소중한 생명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반드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상실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참사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명확하게 하여, 규범과 준칙으로 만들어 내놓아 주십시오.

끝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11년째 표류하면서 가장 서러웠던 것은 책임전가도 아니고, 미보상도 아니고, 지연, 방치, 묵인 등등이 다~ 아닙니다. 가장 큰 서러움은 동병상련하며

의지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싶은 피해자들의 모임을 돕거나 장려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흩어 놓는 정부와 공직자들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적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 가족의 희생이 값진 희생이 되어 두 번 다시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6. 재난 참사, 산재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의 연대 발언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 이영문(허재용 엄마)

저는 6년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허재용의 엄마 이영문입니다.

남대서양도 아니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우리 아들 같은 젊은 생명들이 황망하게 희생된지 일주일도 다 되어갑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젊은이들과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가슴 끝부터 저려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엄마를 보고싶었을까...

자식을 앞세우고 남은 세월, 부모님들이 견뎌내야할 하루하루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악몽 자체임을, 저는 이미 6년이나 겪어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가 참사피해자 가족이 되어 자식 잃은 어미로 이 주황색 잠바를 입고 언론 앞에서 있게 될 줄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영영 내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6년전 그 날 이후, 저는 삶에 아무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저 먼 산만을 바라보며 제발 나도 빨리 죽어 내 자식 곁으로 가길 바라고 있었지요.

6년이란 긴 시간동안 국가는 내 아들이 왜 지금까지 엄마에게 돌아오지 못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질 않습니다. 평생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왔지만 정작 제가 국가의 역할을 요구했을 때는 국가로부터 아무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침몰참사 이후 제 딸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이라도 알아야하지 않겠냐”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러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대답이 없습니다.

만삭이었던 둘째딸과 직장을 휴직한 큰딸이 새벽 4시까지 국회와 외교부를 뛰어다니느라 집에도 못들어오는 것을 보니,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내가 애들에게 밥이라도 해줘야겠다’... 하면서 가까스로 견뎌내었습니다.

자식 잃은 어미는 지난 5년간 매일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을 밝혀달라는 피켓을 들고 서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70대 노인이 되어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 이제 한쪽 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들은 저는 갑작스레 자식을 잃은 엄마 아빠들이 저처럼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그 분들도 아이들이 왜 죽음을 맞았는지 대답을 듣지 못하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국가에 대답을 요구해봐요. 왜 우리가 자식을 다시는 품에 안아볼 수 없게
되었는지 이번엔 반드시 같이 대답을 들어 봅시다.

저는 진실을 꼭 밝혀내어 훗날 아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재용아, 엄마는 네가 탔던 스틸라데이지호가 왜 침몰했는지 결국 알아냈단다. 그래서 다시는
배가 침몰해서 너처럼 억울한 이가 생기지 않게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놨단다.
비록 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네 친구들과 네 후배들은 이제 안전하게 엄마아빠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저처럼 자식들을 앞세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식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내 자식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알아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시간은 약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국가는 대답을 해주세요.

내 자식들이 어쩌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지.

7. 재난 참사, 산재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의 연대 발언 :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김용균 엄마)

세월호 참사때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심하게 가슴앓이를 했지만 내 자식을 잃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자랑스런 경제강국이 되었다지만 국민의 개개인의 생명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자식을 잃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음에
한없이 서럽고 억울해 미칠것만 같습니다. 지금도 아들이 망신창이로 목숨이 끊어질때까지
얼마나 고통에 시달렸을까 생각하면 부모로서 아직까지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는 것조차
아들앞에선 죄인같은 심정입니다.

세월호 대참사가 아직도 우리들 가슴속에 아픔으로 생생한데 또다시 이태원 대참사로 꽃다운
청년들 156명이나 희생시키는 별반 달라지지 않은 오늘입니다. 해마다 2400명 산재사망이
일어나고 있지만 반복되는 죽음을 여전히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저같은
처지의 피해자들이 널려있다고 봅니다. 나를 지켜줘야할 국가가 거꾸로 내 전부를 앗아가버렸을

때 느꼈던 절망감이란 내가 이 나라에 국민이란 게 진저리가 처질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가치를 비참하리만치 격하시키는데 이런 정부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망신입니다.

윤정부가 친기업 반노동을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시키겠다고, 자유를 외치고, 탈원전이 잘못된 정책이라며 안전 제일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한다는 해괴망측한 말을 함부로하니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이번 참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사가 일어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반나절만에 유족지원 대책으로 위로차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얼른 돈주고 얼렁뚱땅 모든것을 덮으려하는 시도는 누가봐도 너무 천박합니다. 저는 자식 잃고 실의에 빠진 유족들을 이토록 멸시함이 더더욱 화가 납니다.

그 행사에 주체가 따로 없다면 현 정부가 책임자입니다. 경찰이 적절한 인원만 투입되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11번의 위험신호를 무시하지만 앓았어도 살아있을 자식들입니다.

지금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진심으로 유족 앞에 사죄하고 제대로 위로하려면 유족들에 의견을 존중해주고 거짓없는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 그리고 다시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위로하는 길일 것이고 스러진 유족들을 부축하며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듯이 국민들을 높은 가치로 존중해야 하며 피해자 유족들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반복된 참사에 함께 아파하며 크게 공분하고 있다는 것을 현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